

경제관계장관회의

24-10-4

(공개)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2024. 6. 3.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추진방향	3
III . 세부 방안	3
1.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3
2. 기술료 우수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5
3. 우수성과 연구자 보상 강화	6
IV . 향후 일정	6

I. 추진배경

- ①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R&D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제도 운영 → 징수규모**는 미미하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 기술료 징수액(약 1,130억원)은 R&D 예산('24년 기준 26.5조원) 대비 0.4%에 불과

현장 목소리

-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이후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부담은 경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 기술료 납부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A기업)”

- ② 우수한 연구·사업화 성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액 상한을 납부하는 우수 납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대부분의 경우 납부한도에 도달할 때까지(최대 5년, 5년 경과시 납부의무 소멸) 납부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속 납부

현장 목소리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여 기술료를 미리 완납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B기업)”

- ③ 출연연·대학 등 현장 연구자들이 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 필요

현장 목소리

- ▶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연구자가 의욕을 가지고 연구를 하여 우수한 연구성과가 창출됩니다.(C연구자)”

◇ 기업부담 경감,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R&D 투자 - 우수성과 창출 - 인센티브 강화’의 R&D 선순환 촉진

[참고] 기술료 제도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 (정의) 연구개발성과 실시*의 대가로 기술실시권자(기업)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R&D 수행기업·대학·출연연 등)에 지급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그 성과를 활용(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기술료 금액·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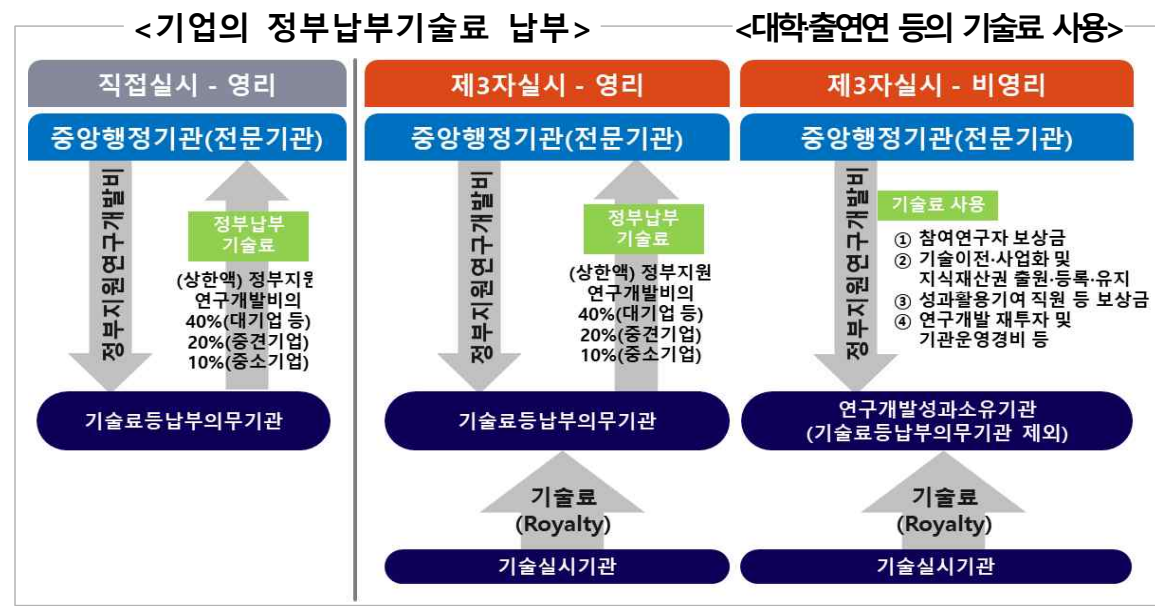
- (기술료 납부) 연구개발성과 소유 기업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 수익(직접실시) 또는 징수한 기술료 수입(3자실시)의 일부를 납부

* 납부한도(정부연구개발비 대비) :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납부요율(매출액 또는 징수한 기술료 대비) :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비영리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 사업화, R&D 재투자 등에 사용

[그림]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



Ⅱ. 추진방향

문제점	대응방향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	▶ 납부요율 대폭 하향으로 기술료 부담 경감
정부납부기술료 조기 완납시 인센티브 부재	▶ 기술료 우수 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현장 연구자의 우수성과 창출 유인 부족	▶ 연구자에 대한 보상 강화

Ⅲ. 세부 방안

1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① 현 황

- 정부지원 R&D 수행기업이 R&D 사업성과에 따른 수익 발생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

- * 유형① R&D 수행기업이 제3자에게 기술실시 후 징수한 기술료 일부를 납부
- 유형② R&D 수행기업이 직접 기술실시 후 연구성과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법 >

- (유형①) 납부액 = 기술료 징수액 × 납부요율
- (유형②) 납부액 = 수익(매출액) × 기술기여도 × 납부요율

- 납부한도 및 납부요율은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에 따라 차등화

< 기업규모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한도·요율 >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납부한도 (연구지원비 대비)	10%	20%	40%
납부요율 (기술료·매출액 대비)	5%	10%	20%

- '22년 기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은 1,130억원으로 산업부·중기부·복지부·과기부가 전체의 91.6%(1,035억원) 차지

< 중앙행정기관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	'21	'22	
			징수액	비중
산업부	886	717	689	61.0
중기부	258	233	196	17.3
복지부	55	33	104	9.2
과기부	202	125	46	4.1
他 부처	158	75	95	8.4
합계	1,559	1,183	1,130	100.0

- 기술료 징수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등으로 산입되어 과학기술 투자 재원으로 활용 중

2 개선방안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

* 과기부·산업부·기재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간 제도개선 협의 실시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기술료·매출액 대비) 세부 개선방안 >

구 분	현 행(A)	개 정(B)	비고(B/A)
중소기업	5%	2.5%	50% ↓
중견기업	10%	5%	
대기업	20%	10%	

⇒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어 향후 5년 이상 단계적 감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개정 연구혁신개발법 시행령 시행 이후 체결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부터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 수입은 '32년 416억원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 개정안을 반영한 중앙행정기관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추계^{1,2} >

(단위: 억원)

구 분	'22	'24	'26	'28	'30	'32
산업부	689	540	472	196	198	128
중기부	196	218	278	230	183	210
복지부	104	9	7	4	2	1
과기부	46	40	24	28	35	43
他 부처	95	74	72	42	38	35
합계	1,130	881	854	501	455	416

1] 부처별 사업화 시기·성공률 등을 고려한 징수액 추계를 합산

2]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4.9월 예정) 이후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 성과에 대하여 개선안 적용

2 기술료 우수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 현 황

- 기술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및 사업화 성공 등을 바탕으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조기에 완납 가능
- 그러나 재정의 조기 회수에 기여한 우수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재

※ 반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부처별 지침 등을 통해 기술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R&D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시행 중

2 개선방안

- 기술료 우수 납부 중소·중견 기업*이 다른 R&D 과제 신청시 가점 부여(중기부) 또는 연구비 사용·정산 절차 간소화** (산업부) 적용

* (예) 2~3년 이내 기술료 완납 등

** R&D 자율성 트랙 대상에 포함시켜 자체정산 허용, 연구비·연구자 변경 자율성 부여

⇒ 기업의 기술료 조기·성실 납부 의욕 고취 및 재정의 신속한 회수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 촉진

3 우수성과 연구자 보상 강화

1 현 황

-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성과 실시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수입은 연구자 보상(50%+α), 성과활용 기여자(10%+α), 사업화 비용(15%+α) 등에 사용
*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 실제 연구자 보상 비율은 평균 55.9%(대학 59.6%, 출연연 53.8% 등) 수준

<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현황(단위: %) >

구 분	'20			'21			'22		
	연구자 보상	기여자 보상	사업화 경비	연구자 보상	기여자 보상	사업화 경비	연구자 보상	기여자 보상	사업화 경비
대학	56.0	3.8	20.1	54.6	5.3	18.5	59.6	3.2	13.5
출연연	56.4	1.7	20.0	56.3	2.6	18.1	53.8	3.1	17.3
부처직할 등	51.0	9.3	21.6	49.3	7.1	25.7	51.7	7.2	22.9
전체	56.2	2.4	20.0	55.6	3.5	18.3	55.9	3.2	15.9

2 개선방안

- 연구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비중을 60% 이상으로 상향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수입 사용비율 개선 전·후 비교 >

사용 용도	기존	개선
(1) 연구자 보상	50% 이상	6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등	15% 이상	좌 동
(3) 성과활용 기여자에 대한 보상	10% 이상	좌 동
(4)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그 외 나머지 금액	좌 동

⇒ 연구현장의 사기 진작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IV. 향후 일정

- (기술료 납부요율 하향 및 연구자 보상 강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4.6월 ~)
- (우수 납부기업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24.6월~)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개정('24.下)

참 고	과제별 추진계획
------------	-----------------

정책 과제	부처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납부기술료 부담 경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료 우수 납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연구자육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정) 	산업부/ 중기부	'24.下/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성과 연구자 보상 강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24.6~